

2019년도 수산기술지원센터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9. 7. 8.부터 7. 12. 까지(5일간)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6. 1월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3건(본 처분 8건, 현지처분 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 2건에 대해서는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분현황(건)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권고통보	계	추징수회수	환급금액
계	13	8	5	8	5	2	1	-	-	-

2019년도 수산기술지원센터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수범사례 1 연구교습어장 사업 운영

- ❖ 쪽이 대량 발생된 바지락 양식어장에 자연석 등을 설치하여 해양환경변화 및 유용 생물 발생 유도로 수산자원 회복
- ❖ 쪽 구제를 위한 효과적 방법 제시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년(3년)
- 사업량 : 4.5ha(3구역)
-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2019년 사업비 : 150백만원(국비 105,000, 시비 45,000)
- 사업지역 : 웅진군 영흥면 선재리 복합양식 21호
- 사업내용 : 자연석 등을 이용한 쪽 서식갯벌 바지락 생산증대 기술개발
- 추진근거 : 해양수산부 연구교습어장 운영관리규정 제5호(사업과제운영)

□ 추진사항

- 2018. 10. 29. : 「연구교습어장」 사업 승인 (해수부 소득복지과-4715)
- 2019. 3. 13. : 「연구교습어장」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5. 10. : 「연구교습어장」 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5. 23. : 「연구교습어장」 사업 환경조사 위탁 협약 체결
- 2019. 6. 21. : 「연구교습어장」 사업 시설공사 계약
- 2019. 6. 24. : 「연구교습어장」 사업 환경조사 위탁 사업 착수
- 2019. 6. 26. : 「연구교습어장」 사업 시설공사 착공

□ 수범사항

- 쪽 대량 발생지역에 3개 시험구를 설치하여 바지락 및 쪽의 자원량 변화와 특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어업인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산 기술 보급
- 바지락 양식장의 쪽 구제 및 유용 생물 발생 환경 조성
 - ⇒ 어장 내 자원 회복 도모 및 바지락 생산량 증가로 어촌경제 활성화 기여

수범사례 2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

- ❖ 수산물 안전성 검사로 유해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소비촉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8 ~ 2019년
- 사업내용 :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분석장비(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65대) 구축
- 검사항목 : 94개 항목(중금속, 유기물질, 항생물질, 미생물, 방사능 등)

□ 추진사항

- 2018. 1. :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 계획 수립
- 2018. 4. : 분석실 리모델링 완료
- 2018. 5 ~12. : 분석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1명)
- 2018. 10. : 중금속 분야 분석장비 구축 완료
- 2018. 11~12. :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실시(32건 / 부적합 0건)
- 2019. 2 ~ 9. : 분석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1명)
- 2019. 6. : 분석장비 구입 계약 의뢰(질소농축기 외 14종)

□ 수범사항

-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양식장, 종묘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로 불량 수산물 사전 차단

2019년도 수산기술지원센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분할발주에 따른 1인 전적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야 하며, 1인 전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ㄱ 리모델링”을 위하여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당초 “ㄱ 리모델링 발주”를 단일사업으로 발주하겠다고 내부 결재(수산물기술지원센터-○○, 2018.○.○.)를 받았으나, 이후 단일사업을 “ㄱ 리모델링 공사”와 “ㄱ 설비공사” 두 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 소홀

「지방계약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1)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대부분의 계약을 전자문서가 아닌 수기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또한,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 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하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받은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한 바를 따르지 않고 전자적 소인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²⁾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입기준은 [표]와 같다.

【표】 채권 매입 기준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대금 청구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참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되,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나 분할 청구 시 200만 원 미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연간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전액을 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매입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과다 또는 과소하게 매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연간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8조제1항에서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지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산물기술지원센터 및 ○○사무소 등의 ㄴ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이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용역임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게 한 후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4 ~ 18일 경과된 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도 용역 완료(기성 및 준공)일이 도래하기 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연간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서 작성 및 변경계약 체결 소홀

「인천광역시 채무회계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회계업무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된 물품의 수량 및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24조에 따라 계약은 채무관 또는 분임채무관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계약 체결 시 채무관(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사업담당자 A 외 1명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납품수량 및 납품기간 등 계약사항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검토나 변경계약 체결 없이 납품 후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였다.

6. 대가 지급 소홀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대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검수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일로부터 14 ~ 30일 지연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가 지급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7. 하자검사 소홀

「지방계약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의 도급계약⁴⁾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 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용역에 대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한 사업에 대한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만료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시정) 부적정하게 청구한 지역개발채권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관련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시고, 소인처리 되지 않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대해서는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 및 대가지급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물품 및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행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표】 예산과목의 성질별 분류

편성목	통계목	설 정
일반 운영비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 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 기준”이라 한다)」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은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고, 편성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 한다)」 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으로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로 집행하고, 급량비 지급 시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맞는 교육참가자 다과 비용과 수산업경영인 전문심사위원 수당 및 식사 비용, 수산업경영인 기술교육 방문업체 기념품 구입비용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사수당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식비도 급식비 기준단가를 준수하지 않고 기준단가(매식비 기준단가 이내)의 3배가 넘는 24,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시정) 강사수당 지급 관련 원천징수 미이행 금액을 산정하여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 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창업어가 멘토링) 지침」 6. 담당기관별 역할
<수산사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홍보,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서식5>를
작성하여 관리,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 및 창업어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견인 목록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8>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사업연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분기별 실적보고(매분기 익월 15일) 및 회계연도 종료시 실적보고(다음년도 1월
15일)를 <서식7>(창업어가 후계인제 추진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종합감사 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들인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 지정예정자들에 대한 홍보는
우편물을 개별 발송토록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와 달리
2019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은 물론 창업어가 지원
대상자는 수산업경영인 사업추진 확인·교육 등을 통해 대면 접촉 시 구두 홍보
등을 통해 선정하였고 후견인은 2018년도 후견인을 재지정한 바 있으며,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실시하여야 할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
(결과) 점검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있고, 후견인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는 만족도조사 및 회계연도 종료시 실적보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분기별 실적보고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주의)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 운영 시 후견인 목록 작성·관리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만족도조사 실시, 실적보고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개선 요구

제 목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운영에 관하여

기 관 명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어업인후계자⁵⁾ 선정 후 교육 미이수에 따른 선정취소 미이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용자) 지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5. 이행점검 단계 - (시·도) - (2) 선정취소’에 따르면 사후교육 조건으로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1년 이내에 교육(3일 또는 21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미이행 시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시·도 및 수협은행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5) “수산업경영인”이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6년 ~ 2018년까지 어업인후계자에 선정되었으나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매년 1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 미이수 관련 당사자 통보·선정 취소 및 선정 취소 사항 수협은행 통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1]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교육 미이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 선정	교 육 미수료	신규 선정	교 육 미수료	신규 선정	교 육 미수료	신규 선정	교 육 미수료
인원	18명	1명	29명	1명	20명	1명	21명	1명
성명	-	B	-	C	-	D	-	E
비고								1년 이내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사후관리 미흡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용자) 지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5. 이행점검 단계 - (시·도) - (1) 사후관리’에 따르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를 실시하고 수협은행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연 1회 관리대상자(대출 미실행자 및 자금상환 완료 자는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수산업경영인 관리현황⁶⁾과 수산업경영인 경영실태⁷⁾를 분석하여 익년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2016년 ~ 2018년 : 익년도 1월 15일
2019년 : 익년도 1월 10일

7) 2016년 ~ 2017년 : 매년 12월 10일
2018년 : 미규정
2019년 : 익년도 1월 10일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6년에는 수산업 경영인 관리현황 및 수산업경영인 경영실태 분석 해양수산부 보고를 수산종합정보 시스템⁸⁾ 입력을 통해 이행하였으나, 그 이후 수산업경영인 관리현황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이행하였고, 수산업경영인 경영실태 분석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익년 2월에 내부결재만을 받고 해양수산부 보고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2018년도 현지실태조사 미실시로 인해 보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표 2] 수산업경영인 관리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해양수산부 보고 현황

구분	수산업경영인 관리현황				수산업경영인 경영실태 분석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행여부	○	×	×	×	○	×	×	×
비고	수산종합 정보시스템				수산종합 정보시스템	2017.02.14. 내부결재	2018.02.07. 내부결재	실태조사 미실시로 자료 부존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시정) ① 2016년 ~ 2018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교육 미이수에 따른 수산업 경영인 선정 취소자에 대하여 선정 취소 및 당사자 통보 이행은 물론 관련 사항을 수협은행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산업경영인 관리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해양수산부 보고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교육 미이수에 따른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교육 참석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과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되는 관련 교육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8) 수산종합정보시스템은 2016년도까지만 운영됨

인천광역시

주의·권고 요구

제 목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하여

기 관 명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미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고,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인원 중에서 지정 인원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 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고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명예감시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누적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군·구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명예감시원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에 대해 실시 여부와 실적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감사 대상 기간 중 ○○구에서 2019년 1월에 실시한 것 이외에 교육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고, 명예감시원 활용계획 수립도 2016년 종합감사 시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6년 ~ 2017년에도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인천광역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소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7-8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⁹⁾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운영요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1.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신고
2. 수산물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 감사·신고
3. 기타 다른 법령에서 수산물 명예감시원 역할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위임한 업무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여하는 업무

같은 운영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¹⁰⁾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운영요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2012.09.27.일 「인천광역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이후 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4호 서식] 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및 ‘[별지 제5호 서식] 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내역서 등 모든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예감시원 재위촉에 관한 사항·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명시·활동기간 한정 및 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0)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신고

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사신고,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원장이 실시하는 지도·조사단속·홍보 등

조치할 사항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주의) ① 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누적관리하여 주시고, 명예감시원 활용계획 및 교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을 모두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포상 제도 운영은 물론, 명예감시원 재위촉에 관한 사항·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명시·활동기간 한정 및 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물품의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불용물품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의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II.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8. 불용 물품 처분 바. 불용결정 1) 불용결정 절차에 따르면 ‘① 운용관의 상태조사 → ② 운용관의 반납요구 → ③ 관리관의 상태 확인 → ④ 기관내 사용부서 조회 → ⑤ 관리관의 불용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운영기준 Ⅱ.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9. 불용물품 매각 나. 불용품의 처분방법 2) 처분절차에 따르면 ‘① 불용결정(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 ② 불용품 소요조회(소요가 있을 시 관리전환) ③ 불용품 처분¹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물품 불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물품관리시스템 상 입력 및 조회되고 있으나, 2016년도에는 관련 절차 중 ‘불용품 소요조회’만을 이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작성’만을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관련 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바와 다르게 무상양여를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18년 정기재물조사 시 관련 물품이 누락되었다.

[표] 물품관리시스템 상 물품 불용 처분 현황

연도	물품명	수량	구입일	불용결정일	처분일	불용결정사유	비고
2016	소파	5	2004.04.23.	2016.04.12.	2016.04.12.	폐기(해체)	
2017	개인컴퓨터	1	2006.10.31.	2017.09.26.	2017.10.13.	폐기(해체)	
	모니터	1	2000.05.09.				
	레이저프린트	1	2004.08.13.				
	복사기	1	2008.07.31.				
	복사기	1	2004.08.10.				
	팩스기기	1	2006.05.01.				
2018	개인컴퓨터	1	2011.05.24.	2018.05.18.	2018.05.25.	무상양여	창고 보관 확인
	데스크톱컴퓨터	1	2013.05.31.				
	데스크톱컴퓨터	2	2013.10.25.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정수관리대상물품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

11) 1단계 : 매각, 보존, 재활용 양여(재활용)

2단계 : 양여(물품관리관 검토 후 양여 받을 기관과 협의)

3단계 : 해체 또는 폐기(해체 또는 폐기조서 작성)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참고> 2.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물품(57종)에 따르면 ‘냉방기’는 ‘연번 - 35, 물품분류번호 - 40101701’으로, ‘실험용세척기’는 ‘연번 - 38, 물품분류번호 - 4113202’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는 “2018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알림 및 물품정수 요청 안내(재산관리담당관-○○, 2017.○.○.)”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수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고 “분석장비(실험용 ㄷ) 구매 계획(수산물기술지원센터-○○, 2018.○.○.)”을 통해 실험용 ㄷ을 구입하였다.

또한, “2019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알림 및 물품정수 요청 안내(재산관리담당관-○○, 2018.○.○.)”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수승인(대체)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고 “ㄱ 물품구입비용 지출(수산물기술지원센터-○○, 2019.○.○.)”을 통해 ㄱ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시정) ① 2018년도에 물품관리시스템에 무상양여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용물품 처분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정수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권고 · 주의 요구

제 목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어촌지도자협의회 임무수행결과서 미제출

○ 어촌지도자협의회 임무수행결과서 미제출 총괄현황(2016~201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비고
협의회 개최수	4회	4회	4회	12회	수당지급 인원수 대비 임무수행결과서 제출비율 56%
수당을 지급한 총인원수	174	173	190	537	
임무수행결과서 제출 수	74	77	150	301	
임무수행결과서 미제출 수	100	96	40	236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해양수산부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시행지침(이하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수산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어촌·수산업 발전의 자문 및 가교역할을 담당할 광역시 단위의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어촌지도자 협의회 구성시 인천광역시 수산물기술지원센터(이하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라고 한다) 소장이 협의회 회장이 되고, 회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어촌계장 및 지역 우수지도자를 위촉하여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 및 회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연 2회이상 정기회의(상·하반기 개최 원칙)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회원 전원 소집을 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집 가능한 현지에서 특정지역 회원 대상 개최도 가능하다.

회의 소집에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소요 경비(수당 등)를 우선 지급하며 이 경우 1회 소집시 수당 등 지급 기준액은 180천원¹²⁾ 이내로 하고 일괄지급한다. 경비(수당 등)는 회의 참석시 우선 지급 후 차기 정기회의 시까지 어촌지도자협의회별 임무수행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경비(수당 등)를 회수 조치할 수 있다.¹³⁾

또한,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예산관련 증빙서류와 협의회 개최결과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임무수행결과서는 수산시책 홍보(임무부여) 및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는 별첨과 같이 3년간 총 236건의 임무수행결과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미제출자에 대해 재차 제출을 촉구하지 않는 등 임무수행결과서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

2. 어촌지도자협의회 위촉위원 아닌 자에 대해 수당 지급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는 해양수산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회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어촌계장 및 지역 우수지도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운영하여 왔다. 특히, 2016년 어촌지도자협의회 경우 회원으로 어촌계장 58명 및 단체지도자 14명 등 총72명을 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하였고 연간 4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12) 회의참석수당 50천원, 관내여비 20천원, 임무수행 중 활동경비 110천원

13) 2018년 시행지침부터 임무수행결과서 미제출 시 경비 회수조치 등 규정이 강화되었음

회의 소집에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는 회원자격이 없는 8명¹⁴⁾에 대하여 해양수산물사업시행지침에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근거로 위촉회원이 아닌 자에게 소요경비(수당 등)를 지급한 바 있다.

3. 기타보상금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301-12)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기타보상금을 사용함에 있어 ‘해양수산물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소요경비(수당등)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도서를 구매하여 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도서(어류도감)를 구매¹⁵⁾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촉회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시정)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의 개최시 수당을 지급한 회원으로부터 임무수행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해양수산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연2회 정기회의는 회원 전원소집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회원의 참석율 제고, 각 어종별 어번기의 차이 반영, 지역별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지역 회원 대상 개최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연간계획수립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해양수산물사업시행지침상 근거없이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회 협의회 참석자 5명, 3회 협의회 참석자 3명

15)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 수산물사무소-○○(2016.○.○.호)

【별첨】

○ 어촌지도자협의회 임무수행 결과서 연도별 미제출현황

2016년도	1회	2회	3회	4회	총계
수당지급인원수	51	50	57	16	174
임무수행결과서 제출	33	-	34	7	50
미회수	18	50	23	9	100
2017년도	1회	2회	3회	4회	총계
수당지급인원수	61	43	49	20	173
임무수행결과서 제출	29	29	5	14	77
미회수	32	14	44	6	96
2018년도	1회	2회	3회	4회	총계
수당지급인원수	57	51	45	37	190
임무수행결과서 제출	44	39	36	31	150
미회수	13	12	9	6	4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 천 광 역 시

통 보 요 구

제 목 수산물 단속업무 관련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담당

내 용

1. 원산지 표시법상 위반정보 공표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동법 제5조(원산지 표시)나 제6조(거짓 표시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및 위반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위반정보 공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을 공표기간으로 하여 광역시, 군·구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표할 내용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입점 판매한 경우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총 7가지 사항이다.

원산지표시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권한이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위반정보 공표사항은 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1차적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한다.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종합감사기간 중 10개군·구의 원산지 표시위반 공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첨1과 같이 남동구 등 5개 군구는 원산지 표시위반 공표를 위한 별도 게시판이 있었고 나머지 5개군구는 별도 게시판이 없었다. 또한 남동구 등 5개군구는 처분이후 원산지 표시위반 공표를 게시한 기록이 있었지만 5개군구는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가 없었다.¹⁶⁾

별첨2의 2018~2019년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따르면 거짓표시 단속건수가 2018년도 총42건과 2019년 상반기 총4건이고, 거짓표시 위반처분은 필수적 공표 대상이므로 단속적발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 걸리는 시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군구에서 원산지표시 공표를 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는 2017년도 감사원이 실시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2018년 5월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시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할구역 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공동활용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 다른 단속기관의 위반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통보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군·구에 해당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통보한 적이 있다. 이 때 처분통보된 사항 중 별표14 《수품원 및 시군구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사실 공표 누락 명세》 표 중에 미공표로 지적된 군·구는 부평구 등 4개군구 였으며, 총9건의 공표누락 사항이 지적되었다.¹⁷⁾

2. 상급관청으로서의 감독책임 등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법상 주요권한이 현재 법령에 따라 군·구에 위임된 상태라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군구에서 시행하는 원산지표시법상 처분과 공표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질 수는 없다.

하지만, 권한이 위임된다고 할지라도 위임행위 자체에서 생기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 상급관청으로서의 일반적 감독책임은 피할 수는 없다. 인천수산

16)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원산지 표시위반 처분이 1년동안 없었을 수도 있고, 둘째 위반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위반 공표를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원산지 표시위반 처분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은 군구 위임사항으로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에서는 감사기간 중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17) 서구 2건, 강화2건, 부평구4건, 남동구1건

기술지원센터는 군구에서 원산지표시법상 처분과 위반사항 공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원산지 표시법상 위반정보 공표는 관련업체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효과도 있으므로 해당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통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법상 위반정보 공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구별 위반정보 공표여부에 대한 홈페이지 모니터링 강화, 군구와 위반정보 공표 정보공유, 군구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업무연찬 등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군구별 원산지 표시위반 공표 현황

군 구	홈페이지상 별도의 공표사이트유무	게시 유무	최종게시물	비고
중 구	○	○	2017.11.13.(농산물)	
동 구	○	○	2018.1.2.(농산물)	
미추홀구	×	×		
연수구	×	○	2018.7.23.(농산물) 공지게시판 게시	
남동구	○	○	2019.6.19.(수산물)	위반정보 공표 양호
부평구	×	×		
계양구	×	×		
서 구	○	○	2019.7.1.(수산물)	미게시 지적후 게시 처분일(2019.5.23.)
강화군	○	×		
옹진군	×	×		

◆ 수감기관 작성자료 재구성

【별첨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적(2018~2019)

○ 2018년

	점검업체수	과태료 부과 (천원)	위 반 내 용		
			계	미표시	거짓표시
합 계	7,528	6,877	114	72	42
중 구	2,715	618	17	10	7
동 구	211	100	3	2	1
미추홀구	138	-	-	-	-
연수구	158	680	9	8	1
남동구	3,034	1,569	39	24	15
부평구	314	50	5	1	4
계양구	308	455	8	4	4
서 구	200	2,100	24	16	8
강화군	123	705	5	3	2
옹진군	327	600	4	4	-

○ 2019년(5월말 기준)

	점검업체수	과태료 부과 (천원)	위 반 내 용		
			계	미표시	거짓표시
합 계	1,464	1,698	38	34	4
중 구	505	225	6	6	-
동 구	21	100	2	2	-
미추홀구	22	-	-	-	-
연수구	78	50	1	1	-
남동구	413	1,093	22	20	2
부평구	261	230	5	4	1
계양구	116	50	1	1	-
서 구	28	-	1	-	1
강화군	20	-	-	-	-
옹진군	-	-	-	-	-